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보건사회정책 연구에 전념할 것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때 : 2009년 10월 16일(금) 오후 2시

곳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집무실

대담 · 정리 :

김병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관리팀장

〈약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2008년~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008년~현재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2007년~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근상임자문위원

1998년~현재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교수(휴직)

1994년~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984년~1994년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우리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해줘야 복지정책도 업그레이드 되고,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중산층 대책이나 사회 통합 등 국가적 현안 이슈의 영향으로 더욱 바빠진 정책 연구기관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정책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다.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설립된 이래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를 비롯해 보건의료·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사회정책 연구의 산실로 기능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을 만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 대학 강단으로 자리를 옮긴 지 10여 년 만에 연구원의 기관장으로 다시 돌아온 김용하 원장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연구 성과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강조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관리체계 확립, 핵심 연구역량 확충, 혁신적 경영관리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그간 연구원의 성과와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과제 등에 관해 들어봤다.

원장께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연구원 생활과 대학 교수를 거쳐 지난해 9월 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경영방침은 무엇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 사회정책 연구의 선도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정책수요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우리 연구원이 이들을 리드하기보다는 받쳐주는 역할을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요자보다 한 걸음 먼저 뛰어야 한다. 연구계획 세우는 것도 그렇고, 연구 및 평가에서도 그렇다.

또한 연구기관의 생명은 객관적이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통해 국가정책 기여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이 국가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책무를 늘 마음에 새기고 연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우리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해줘야 복지정책도 업그레이드 되고,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경영전략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근거, 정보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뭘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관점에서 시작해서 정책방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다 보니 객관성과 실용성이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모든 연구는 정보가 없으면 제대로 될 수 없다.

우리 연구원은 조사 기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조사시스템을 분리 독립시켜 전문적,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게 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경제활동인구 조사 등은 통계청,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망에서 얻어 와야 한다. 원활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이들 기관과 MOU를 맺을 필요가 있다. 정보 생산은 효과적으로 하고, 외부 정보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부문의 정책연구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 설립 이후 대표적인 성과를 정리한다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보건으로 정책연구의 참가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용하 원장

먼저 가족계획과 관련한 정책연구 성과를 꼽을 수 있다.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출범할 당시에는 가난한 살림에 자녀 수가 많은 게 큰 문제였다. 우리 연구원은 산아정책 관련 연구를 주도했고 소기의 성과를 이룩했다. 최근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1981년 보건개발연구원과 통합해 현행 체제가 되었는데,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정책들을 연구하여 불모지에 가까운 보건 현실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복지국가 개념이 중시되면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성과도 이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복지제도는 모두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제도들을 개발하고, 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해 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여러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원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유일하다. 다른 연구기관들은 저출산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지, 저출산 문제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의 원인,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저출산 현상 및 추이,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저

출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저출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학술회의를 주최하는 등 외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국민 의식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저출산과 관련된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여러 학회들을 모아 저출산 포럼을 만들었다. 포럼을 통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대안 제시가 긴요하다. 이를 위한 보건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

우리나라 국민 중 성장만 혹은 복지만 추구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의 조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말은 1970년대 중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울 때부터 계속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치·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보듯 다들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고 있다.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해야 한다. 그 답을 우리 연구기관이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세부적인 차원의 연구는 많이 했지만 큰 틀에서의 연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명확하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거시적 안목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보건사회정책 연구에 전념할 것이다.

이제 복지는 전 국민을 위한 복지이고, 한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뿐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의 큰 틀을 재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원의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연구원 발전과 연계시킬 방안은?

그동안의 연구는, 가능하면 우리가 한 연구가 사회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왔다고 본다. 보건사회와 관련된 정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따르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우리가 하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당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이슈를 리드한다기보다는 발생한 이슈를 봉합하는 데 급급했던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정책이 복잡할수록, 이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 연구원이니까 최전선까지 가자. 그걸 피해 가고 어정쩡하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견 아니다. 분명한 우리 입장을 만들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건 충분한 근거, 객관적 연구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든 다음, 그 대안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갈등이 존재한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출범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 계층·이념·지역·세대·성(性)·인종(다문화) 등에 기인하는 갈등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 연구원의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도 있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축적해온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자는 게 기본전략이다.

연구원의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우리 연구원은 그 동안에도 열심히 해왔지만 이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연구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2년 후면 연구원 설립 40주년이 된다. 그러면 40살에 걸맞는 연구기관이 되어야지, 여전히 10살짜리, 20살짜리로 처신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불혹의 경륜에 걸맞는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식이라고 본다. 내가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고, 그래서 즐겁게 일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국민들 또한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존재의의를 찾는, 보람된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국책연구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우리 연구원에게 일정한 예산을 주었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최소한 몇 배의 결과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자세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국민들이 우리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것이고, 그렇게 인정해 주면 우리의 위상과 처우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의 구성원들은 정부 부처 등 정책수요자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최종 수요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비전정책